

북미정상회담 3가지 관전포인트

1 CVID 체결 2 北 체제보장 및 수교 3 종전선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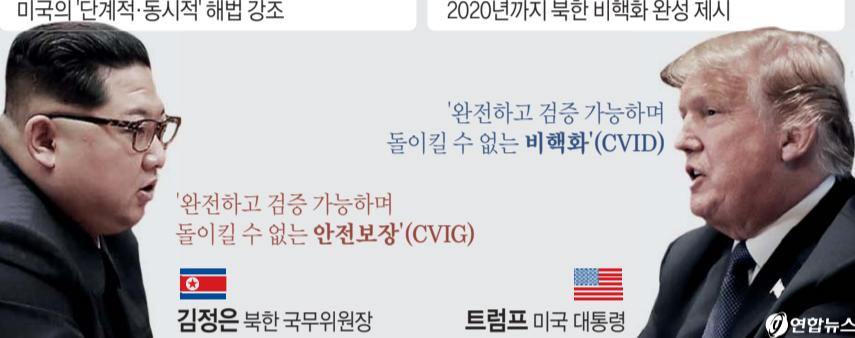
북미 '비핵화 담판' 주요 쟁점별 입장

북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반드시 'CVID 원칙' 명기
미국의 'CVID' 용어 사용 반대. 폐전국에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강한 거부감	

북 체제 보장	핵무기·핵물질·ICBM 등 보유핵의 해외 반출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
비핵화 이전에 재제 완화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 등 구체적 청사진 제시 요구 (종전선언,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비핵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핵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량살상무기(WMD) 등 반출·폐기 · 미래핵 우리늄·플루토늄 등 핵 원료, 영변핵시설, 핵실험장 등 핵시설 폐기 	

비핵화 기한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 완성 제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보장'(CVI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담판을 벌이는 센토사섬은 말레이시아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마치 현재의 상황을 미리 예견한 듯한 이름을 가진 센토사섬에서 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북미정상이 12일 회담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전세계의 관심이 온통 싱가포르 남부의 작은 섬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핵화, 톱 다운 방식 핵폐기 논의할듯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세기의 담판'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이 바로 비핵화 방법론이다. 이번 회담이 '핵(核) 담판'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후 지난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로 향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1분 이내면 알아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많은 협상을 통해 사업을 키워온 경험을 가진 자신의 통찰력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 여부를 순식간에 간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マイ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

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트위터에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함께 조찬을 하는 사진을 올리고 "나의 국무부 팀과 함께 일찍 브리핑을 받았다. 성 김 대사가 오늘 북한과 만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CVID에 전념하고 있다"며 CVID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CVID는 북미 양국이 이번 협상을 앞두고 가장 침예하게 대립해온 대목이다. 이 날 싱가포르 현지에서 미판 조율에 들어간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 실무협상 역시 CVID 문제가 핵심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지난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에도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포함됐다.

앞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비핵화를 놓

고 이번엔 북미정상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고 있는 것이다.

CVID의 핵심은 핵폐기다. 과거 미국은 핵동결→신고→검증→불능화→핵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이번 담판을 통해 CVID를 관철시키려 내친김에 최종 목적지인 '핵폐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북인이다. 전철을 담습하지 않고 이번엔 '톱 다운(To p down)'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핵무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개월 안에 일부라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체제보장 넘어 北-美 수교선물

CVID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즉 CVIG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오기 전 "김 위원장은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의 국민, 그 자신, 그족들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서 이번 만남을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언급했다.

비핵화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체제보장과 국제 사회의 도움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다. 이를 놓고 앞서 미국은 '선 비핵화-후 체제보장'을 내세웠지만 북한의 반대에 부딪히며 비핵화와 체제보장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됐다. '판문점 선언'에도 '북측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들은 북한을 완전하게 비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을 할 용의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범위에서의 진전을 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체제보장이 약속되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까지 실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질문에 "관계 정상화는 내가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관계 정상화)하기를 희망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는 비핵화를, 정상화는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를 의미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원칙과 미국의 체제보장 원칙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의 조건과 방식은 2차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적인 실무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양국 종전 '선언' 땐 법적구속력 갖춘 2차선언 필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6·12 북미정상회담 뒤 종전선언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다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장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동참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차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기간 중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대하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과 함께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초청장'이 날라오기만을 학수고대했었다. 겉으로 '투표 참여 독려'가 목적이었지만 청와대 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과 지난 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 것도 만에 하나 있을 싱가포르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 나는 분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달 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직후에도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을 출발점으로 하고 북미 수교, 즉 국교정상화를 종착지로 하는 체제보장 로드맵을 거론하기도 했다. '종전 선언→평화협정→국교정상화'의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종전선언도 비핵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당장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향후 남북미 3국, 또는 남북미중 4국이 추

가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은)주최가 몇 명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느냐가 문제"라면서 "형식상으로 선언이나 협정이냐 조약에 따라서 다르겠고 내용도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되 이것이 '정치적 선언'에 머무를 경우엔 향후 남북미 등이 참여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되는 2차 종전선언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정전협정일인 오는 7월 27일 또는 9월에 있을 UN총회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호 기자

햄버거 협상·현송월의 깜짝공연 이뤄질까

'햄버거' 두 정상 허심탄회 협상 의미
수행단에 삼지연 악단 포함 '공연 기대'

'세기의 핵 담판'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국 정상이 어떻게 협상할지도 관심거리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고,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수행단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도 포함해 북한 측의 깜짝 공연이 포함

된 오찬·만찬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북미 최고지도자가 대화하는 첫 자리이고, 햄버거라는 먹거리와 현송월이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에 비춰볼 때 그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지대하다.

햄버거 애호가로 알려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햄버거 협상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해왔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햄버거를 즐겨 먹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릴 적 스위스 유학을 떠올리면 햄버거에 낯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햄버거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회담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돼 오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햄버거가 메뉴로 오를 수도 있다. 이는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협상한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

햄버거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패스트푸드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개혁



북미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싱가포르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현송월 단장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방의 상징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날 로이터 통신의 보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당일 오후 2시 싱가포르에서 평양으로 출국한다면 북미 정상의 공동 오찬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 싱가포르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시작된 회담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 오찬을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오찬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햄버거가 오찬 메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 간 '문화 외교' 여부도 관심사다. 문화 교류가 싱가포르 협상 이후 양국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수행단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도 포함돼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 단장은 남북 예술단 공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어서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문화 교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승호 기자